

호남반도체산단 전격전… 전력·용수 ‘예타 면제’ 추진

전력공급 1단계 공사 관련 기관 막바지 협의

동북댐 증고 등 용수시설 확충 사업도 추진

조만간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가능성 관측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필수 인프라인 전력·용수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가 추진된다.

20일 정가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 광주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호남 반

도체 국가산단에 필요한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해 예타 면제를 최종 협의하고 있다.

기후부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력·용수 관련 사업 시행기관과 제

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론되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반도체 국가산단에 들어갈 전력 1단계 공급선로 공사, 동북댐 증고 확장 공사, 산단 연결 광역상수도 관로 신설 확충 공사 등이다.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전력을 산단에 공급하는 1단계 지중선로(신장성/신광주 분기~산단 선로 약 23km) 공사 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2029년부터 초기 설비를 통해 산단에 약 3GW를 공급하고 이후 송전선로와 변전소

를 추가 구축해 6GW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용수 문제도 단계 별로 산단에 공급할 하루 용수 65만ℓ을 확보한다. 동북·주암댐에서 산단에 하루 35만ℓ의 공급용수를 공급하고 2단계로 하수재이용수와 나주댐을 더해 일 30만ℓ 용수를 추가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반도체 국가산단 인프라 조성 사업들이 국가재정정상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인프라 조성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안건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르면 다음 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강조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행정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정부는 아직 국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반도체

산단 인프라 구축 관련 여러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전격전’을 선언한 만큼, 조만간 예타 면제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은 광주군 공항 부지 일원 약 826만㎡(약 250만평) 규모로 들어선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800조원대 투자를 통해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한다. 2030년 6월 반도체 양산이 목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의 주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남

軍 “광주 1전비 분산배치 충분히 검토”

“서남부권 대비태세·조종사 양성 영향 최소화”

군 당국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따라 2028년 증순까지 추진되는 광주 제1 전투비행단(광주 군 공항 주둔) 기능 분산 배치와 관련해 서남부권 대비태세와 전투 조종사 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전비 기능 이전에 따른 대비태세와 조종사 양성 차질 가능성에 대해 “지난 기간 동안 충분히 검토했다”라고 말했다.

손 총장은 “수용하는 기지와 대비태세, 조종사 양성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부분은 확실히 검토했다”라며 “국방부 장관과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했다”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전과 관련해 신규 시설과 인프라 구축 등 우리 군의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군은 현재 광주 1전비 이하 제189·제216비행교육대대를 경북 예천 제16전투비행단으로, 제206전투비행대대를 충남 서산 제20전투비행단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9·216비행교육대대는 T-50 고등훈련기를 운용하며 전투기 조종사의 고등비행교육을 담당한다. 206전투비행대대는 TA-50 경공격기를 운용해 전술임포과정교육을 수행하는 동시에 서남부권 영공방어 등 실전 임무도 맡고 있다. 예천 16전비는 KF-21 전력화가 진행되는 기지에서, 189·216비행교육대대가 추가 배치될 경우 조종사 교육과 KF-21 전력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활주로의 공역 운용 등에 병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공군은 수용기지 여건과 교육·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이미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끝까지 추적 환수한다

박근혜 주도 범죄수익 ‘독립몰수제’ 본회의 통과

범인 사망·국외도피·소재불명에도 몰수·추징 가능

전두환·노태우 등 군사반란 수괴들의 비자금부터 보이스피싱과 성착취물까지 불법적인 범죄수익금을 당사자가 사망해도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갑·사진)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소 제기와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범인의 신원을 알 수 없더라도 관련 범죄와 몰수 대상 재산이 특정되면 독립몰수가 가능

하다.

현행 형법 체계에서 몰수는 원칙적으로 형벌에 부가해 선고되기 때문에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등 유죄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계가 있었다. 범죄수익이 가족이나 제3자에게 넘어가면 환수는 더욱 어려워져 불법 재산이 사실상 대물림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독립몰수·추징 대상에는 보이스피싱과 인터넷 불법도박, 마약범죄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도 포함됐다.

특히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이 국고에 귀속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범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 환부 근거를 추가로 반영했다.

범죄수익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상속·증여하거나 헐값에 넘겨 환수를 피하는 행위도 차단했다. 취득자가 관련 정황을 알지 못했더라도 무상 또는 현저

히 낮은 가격으로 넘겨받았다면 해당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또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그 범죄로 취득한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뇌물·횡령·배임 범죄의 수익은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범사위 행 전에 발생한 범죄수익에도 적용된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비자금 의혹이 드러났지만, 현행법의 한

계로 환수가 어려워 국민적 공분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박근혜 의원은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했다는 이유로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개정안은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의 길을 여는 동시에 보이스피싱과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한 민생범죄의 자금줄을 끊는 입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축적돼 가족에게 대물림된 비자금은 끝까지 추적하고, 민생범죄로 얻은 수익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며 “환수된 범죄피해재산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특별시, 통합 후 첫 추경 편성…3000억 규모

지방채 1400억 발행 예정

교육청 미전출금 일부 해소

통합 채무관리 쟁점 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후 첫 추경 예산안 가운데 3226억원으로 판단하고, 이 가운데 약 43%인 1403억원을 지방채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특별시는 오는 9월 시의회에 제출할 추경안에 통합 전부터 미반영된 법정·의무경비와 국비사업 지방비 부담분 등을 우선 반영하기 위한 세부 조정 작

업을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신규 사업 확대보다는 교육재정교부금과 의료급여 전출금 등 법정 경비, 국비사업 매칭분과 도시철도 2호선·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지출이 예정된 의무경비 등을 충당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지역사랑상품권과 병 경영안정대책비 등 민선 9기 출범 이후 필요한 자체 사업도 일부 반영할 예정이다.

통합교육청에 지급하지 못한 법정전입금도 상당 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기존 광주교육청 미반영액 1000억원 가운데 약 400억원을, 전남교육청 미반영액 816억원 중 600여억원을 이번 추

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전입금은 다음 추경에 지급하거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추경 편성을 위해 시는 우선 세외수입 1281억원을 확보하고 기존 사업비 442억원을 줄이는 등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1723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예비비 100억원도 활용한다.

특히 1403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도 검토한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응 지방비율 지방채로 발행할 수 있게 함에 따라 통합시는 지원금 지방비 부담분을 지방채로 조달할 방침이다.

광주특별시 예산부서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지적한 것은 기존 광주의 지방채 규모가 전남보다 큰 상태에서 통합돼 전남이 그 부담을 떠나는 것 아니냐는 취지”라며 “이미 통합됐고 별도 세입이 확정되지 않으면 가용 세입과 지방채로 법정 부담금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특별시는 부서별 사업 조정과 옛 광주·전남 재정 수요 협의를 거쳐 추경 규모와 지방채 발행 대상을 최종 확정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의회도 추경안 제출에 대비해 당초 9월 14~21일로 예정한 제1회 정례회 일정을 9월 8~18일로 변경, 회기를 8일에서 11일로 늘려 심사 기간을 확보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1면에서 정부는 국정과제인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추진’에 따라 2030학년도 지역 의대 정원 100명의 배정 후보로 경북과 옛 전남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중 제출된 계획서를 심사해 신설 지역과 대학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립경북대를 중심으로 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경북과 달리 전남광주는 대학과 임지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핵심 내용이 빠진 계획서로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의대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립의대 신설이 좌초하면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990년 5월 19일 목포대가 정부에 의대 신설을 공식 건의한 이후 36년간 이어진 지역 숙원이 대학과 정치권, 행정기관의 조정 실패로 무산됐다는 책임론이 불가피하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립은 이미 서부권과 동부권의 갈등으로 번졌다. 지역 정치권도 각자의 지역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앞세웠을 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민선 8기 당시 옛 전남도는 통합의대에서 공모를 통한 단독의대, 공동의대를 거쳐 다시 통합의대로 추진방식을 거듭 변경했다.

민선 9기 통합특별시 역시 두 대학의 자율 협상에 기대면서 제출 시한까지 최종 결론을 끌어내지 못했다.

통합특별시는 두 대학의 추가 합의만 기다리지 않고 정부를 상대로 새로운 해법을 찾기로 했다. 대학 통합 여부와 옛 전남지역의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을 분리해 판단하고, 두 대학 통합을 필수조건으로 둔 현행 추진방식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대학통합이 무산됐지만 지역의 오랜 숙원인 국립의대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정부와 추진방식 변경을 협의해 옛 전남지역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